

중국경제 현안 브리핑

03-20호 / 03월 26일

China Development Forum: 전면적 小康社會 건설 문제 집중 토론

1. 개요

□ 3월 22~24일까지 북경 다오위타이(釣魚臺) 국민관에서 오이(吳儀) 중국국무원 부총리를 비롯한 각 부처 신임 장관과 국내외 석학, 다국적기업 총수들이 참석한 가운데 “중국: 전면적인 소강사회 건설”이라는 주제로 China Development Forum(중국발전고층논단)이 개최되었음.

- China Development Forum은 2000년부터 국무원발전연구중심(DRC) 주관하에 매년 3월 하순 중국 전인대 폐막 직후에 열리며, 중국의 각료급 관리와 국내외 석학 및 CEO들이 참석하여 중국경제 현안과 정책방향에 대해 심도있게 토론하는 권위있는 국제포럼임.
- 이번 포럼에서는 시장시스템 완비, 공업화와 기술혁신, 농민소득 제고와 농촌 경제, 경제발전과 도시화, 금융개혁, 국유자산관리체제 개혁, 지역간 발전격차 해소 등 2020년까지 전면적인 소강사회 건설을 실현하기 위해 중국이 해결해야 할 각종 현안과 정책 과제에 대해 집중적인 논의가 이루어짐.

2. 주요 참석자

□ 중국측 대표로는 신임각료 및 금융인, 기업인, 저명학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함.

- 각료 및 금융인: 오이(吳儀) 국무원 부총리, 뤼푸위안(呂福源) 상업부장, 왕광타오(汪光燾) 건설부장, 왕춘정(王春正)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부주임, 왕멍웨이(王夢奎) 국무원발전연구중심 주임, 로우지웨이(樓繼偉) 재정부 부부장, 저우샤오촨(周小川) 인민은행장, 천위안(陳元) 중국개발은행장 등
- 기업인: 주즈민 쇼우강(首鋼) 동사장, 루밍 창청컴퓨터 총경리, 위둔차이 신성집단 총경리 등
- 학자: 린이푸(林毅夫), 하이윈(海文), 북경대 교수, 후안강(胡鞍鋼) 청화대 교수, 판강(樊綱) 국민경제연구소 소장 등

□ 외국측에서는 다국적기업 총수, 금융인, 저명학자 등 약 30 명이 참석함.

- 기업인: Taizo Nishimuro 도시바 회장, 박태준 포스코 명예회장, Michael Trechow 에릭슨 회장, Edward Michelin 미셸린 회장, Stanley Fisher 시티그룹 부회장, Mark Shultz 포드사 부회장 등. 박태준 전 총리는 DRC 산하 중국발전연구기금회의 국제고문 자격으로 참석
- 국제기구: Tadao Chino ADB총재, Donald Johnston OECD사무총장, Frannie Leautier 세계은행 부총재 등
- 학자: Dwight Perkins 하버드대 교수, Lawrence J. Lau 스탠포드대 교수, Martin Feldstein 美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NBER) 소장, 안충영 한국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원장, Stephen Roach 모건스탠리 수석이코노미스트 등

3. 주요 발언요지 및 토론내용

□ 우이(吳儀) 부총리: 개막사에서 소강사회 건설에 대한 자신감 표명

- 중국은 시장경제의 기본적인 틀을 이미 마련하고 그것의 완성을 위해 각종 개혁조치를 추진중에 있으며, 장기적인 경제건설과 세계경제 글로벌화에의 적극적인 참여 과정에서 국내외적인 문제점과 환경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고 극복할 수 있는 경험을 축적해 왔음.
- 중국정부는 거시경제정책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무엇보다 중시하고 있는바, 금년에도 내수확대 방침을 견지하고 적극적인 재정정책, 안정적 통화정책을 실시할 것임.
- 또한 정부기구 개혁, 국유자산관리체제 개혁, 금융개혁, 농촌개혁을 심화시켜 경제발전 과정에서 나타나는 각종 문제와 모순을 집중적으로 해결하고, 개혁추진에 필수적인 양호한 시장환경 마련에 주력할 것임.
- 중국은 WTO 가입시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바, 제반 범규 정비, 시간표에 따른 시장개방, 관세·비관세 장벽 철폐 등을 추진해 왔음. 중국의 평균관세율은 지난해 초의 15.3%에서 금년초에는 12%로 낮아졌으며, 금년말까지는 11%로 인하될 것임.
- 오 부총리는 아직 경제수준이 낮고 발전이 불균형한 중국의 현실을 감안할 때 전면적인 소강사회 건설은 상당한 난제인 것이 사실이나, 중국정부와 인민은 이러한 곤란과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자신감을 표명함.

□ 왕명웨이(王夢奎) DRC 주임: 전면적 소강사회 건설의 목표와 전망

- 왕 주임은 기초연설에서 중국이 2020년까지 건설할 소강사회는 △전국민이 경제발전의 성과를 향수하고, △물질생활 수준 뿐만 아니라 정치문명과 정신문명을 포함한 전면적인 진보를 실현하는 단계라고 규정함.

- 소강사회 건설과정에서 해결해야 할 난제로서는 △농업의 현대화 실현 및 수 억 농민의 비농업부문 이전 문제, △노령화사회 조기 진입에 따른 취업압력과 양로부담, △부존자원의 상대적 부족, △경제발전 수준에 비해 낙후된 사회발전 수준, △지속가능한 발전에 걸맞지 않는 현행 체제와 법률법규, △낙후된 기술수준, △세계화 추세와 세계정치·경제 환경의 불안정성 등을 지적함.
- 중국은 현재 △경제체제의 전환, △경제성장방식의 전환 △이원적인 경제구조에서 현대적 경제·사회구조로의 전환 등 3가지 근본적인 전환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물질문명·정신문명·정치문명의 3가지 문명 건설을 추진중임.
- 또한, 중국이 소강사회를 향해 끌고 가야 할 인구 규모는 현재까지 공업화와 현대화를 실현한 국가들의 전체 인구규모에 상당하며, 이같은 전례없는 변혁과정에서 과학기술과 생산력의 도약, 이익관계의 대폭 조정, 엄청난 사회구조의 변화가 수반될 것인바, 이에 따른 사회적 충격을 피하기 위해서는 개혁과 발전, 안정을 조화시키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강조함.
- 한편, 왕주임은 중국의 부상을 경계하는 이른바 “중국위협론”은 근거 없는 주장이며, 중국경제의 지속적인 성장과 대규모 건설 및 주민소비구조의 고도화는 모두 새로운 시장수요와 국내외 투자자들에게 커다란 투자기회를 제공하고, 세계경제의 안정과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상호보완과 윈-윈의 국면을 형성할 것이라고 강조함.

□ **저우샤오촨(周小川) 인민은행장:** 금융개혁의 미시적인 측면 중시

- 저우 행장은 많은 사람들이 금융개혁을 거시경제의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으나 금융개혁 중 상당부분은 미시적인 개혁을 증시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특히 은행시스템의 개혁과 관련하여 다음 네 가지 측면의 문제점을 지적함.
- 첫째, 중국 은행업은 여전히 계획과 시장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바, 정책성 담보와 인수합병(M&A), 정책성 전환사채 등이 존속하고 있음. 이같은 정책성 업무는 비록 은행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작지만 은행의 부

실자산 감소와 대처능력을 약화시킴.

- 둘째, 금리차와 비용이 은행업의 원가에 반영되지 못하고 있으며, 심지어 상품 가격은 시장이 결정한다는 기본원리조차 제대로 시행되지 못함. 일부 금융기관은 종종 자본금이 부족한 상황에서 고금리로 예금을 흡수하여 리스크를 은폐하고 있음.
 - 셋째, 금융기관은 경영시스템 개혁면에서 일반 공업기업에 뒤져 있어, 직원 인센티브시스템에 대한 자주권 등이 없고, 시장진입 제한도 지나치게 엄격함.
 - 넷째, 지금까지 국가가 관리해 온 국유상업은행들의 주식제 개편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야기될 기업지배구조 문제, 은행의 인센티브 결정권 문제, 감독시스템 및 회계기준 정비 문제 등을 해결해야 함.
- 중앙은행의 역할과 관련, 저우 행장은 금후 인민은행이 통화정책의 입안과 집행에 집중함으로써 거시경제의 안정적 운영을 보장하고, 금융업의 건강한 발전을 지원하여 금융리스크를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함.
 - 또한 신설되는 은행감독관리위원회와 인민은행은 서로 경쟁관계에 있지 않으며, 금후 인원과 기구 조정을 거쳐 정보를 공유하고 통화정책과 효율적인 금융감독의 시너지효과를 충분히 발휘시키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밝힘.
 - 한편, 은행의 불량자산 문제는 여전히 금융개혁의 최대난제이며, 현재 중국은 대출심사기준 강화 등을 통한 신규 부실채권 발생의 방지와 기업의 재무재표 규범화, 표준화 작업도 서두르고 있다고 밝힘.

□ **왕춘정(王春正)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부주임:** 신형 공업화와 정부기능 전환

- 중국이 지향하는 신형 공업화는 전통적인 공업화 과정과 달리 △정보화 가속화 △경제성장의 질과 효율 중시 △기존의 조방형 성장방식 전환 △생태환경 건설과 보호 △인력자원 우세 발휘 등 5개 방면에 주력함.
- 이를 위해 투용자체제개혁, 행정심사절차 간소화, 기업의 독자적 의사결정권 허용 등을 포함한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의 기능 전환을 추진할 것임.
- 동시에 개인, 사영경제를 포함한 중소기업의 발전을 장려해서 도시화와 농촌

유휴노동력의 도시이전 촉진 및 그에 따른 농민소득 제고 등을 해결함.

- 서비스산업의 발전은 공업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바, 도시화 수준의 제고와 함께 정부는 현대적인 금융, 보험, 정보서비스, 유통 등 서비스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임. 왕 부주임은 2020년까지 중국의 서비스산업 비중이 50%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함.

□ **뤄푸위안(吕福源) 상업부장:** 대외경제 부문에서의 원·원전략 추진과 공정한 국내시장시스템 구축

- 금후 중국은 상품과 서비스무역을 진일보 확대하고, 기본적으로 수출입 균형을 유지하며, 대외경제 부문에서의 원-원 실현에 주력할 것임.
- 2002년 중국은 502억 달러의 외국인투자를 유치했고 IT를 비롯하여 서비스, 자동차 등 산업이 외국인투자의 초점이 되었으며, 다국적기업의 투자 진출도 두드러진 성과를 보였음.
- 국내경제 뿐만 아니라 대외경제 협력에서도 3차산업이 중요하며, 금후 중국은 외자유치의 중점을 3차산업으로 이전할 것임.
- 중국계 기업의 해외진출도 급증, 2002년 말 현재 해외에 진출한 중국기업은 6,960개, 투자액은 약 100억 달러에 달함. 중국기업의 다국적 경영은 중국의 시장확보 외에도 세수 납부 등을 통해 현지 경제의 발전에도 기여함.
- 국내 유통시스템과 관련해서는 지역간 보호무역주의 타파와 통일시장 구축이 시급한 현안인바, 상업부는 우선 법제를 완비하고 여타 부처와의 협력을 통해 통일·개방·공정한 경쟁에 바탕한 시장시스템을 구축할 것임.
- 역내 지역협력과 문제와 관련해서 중국은 지역경제협력에 적극적인 입장을 견지할 것이며, 중국과 아세안 간 FTA는 이미 시간표가 정해졌으나 구체적인 협력 사례가 어떤 형태가 될 것인지는 아직 미정이라고 밝힘.
- 한편, 중국에 대한 반덤핑 제소의 급증 요인에 대해서는 많은 경우 중국의 시장시스템에 대한 외국의 이해 부족 내지는 불신에 기인한 측면이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반덤핑 메커니즘은 비교적 합리적이고 믿을 만한 장치라고 평가함.

□ 로우지웨이(樓繼偉) 제정부 부부장: 시장의 자원배분기능 극대화가 지역간 균형발전의 관건

- 자원과 환경, 인력, 자본, 기술, 제도 등 생산요소의 지역별 차이 때문에 지역경제의 불균형 발전은 불가피하지만, 공공재정은 시장의 결함을 보완하는 것이 시장역할을 대체할 수는 없음.
- 따라서 적자재정을 유지하여 낙후지역에 대한 지원을 지속하기보다는 시장의 자원배분 기능을 극대화시켜 시장원리에 따라 인력과 자원이 낙후지역에서 선진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
- 지역경제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노동력의 합리적인 이동 촉진과 민영자본의 진입장벽 완화가 시급함. 이를 위해 발달지역의 호적제도를 개선하고 외부에서 유입된 노동자 및 자녀의 교육, 의료 여건을 개선해야 함.
- 또한, 로우 부부장은 지방의 세수개혁과 관련, 현재 중국 지방정부는 세수의 90%를 차지하는 부가가치세, 소비세, 소득세 및 관세 등의 세율에 대한 결정권이 없으며, 조만간 부동산세 등 지방정부가 세율을 결정할 수 있는 세목을 확정할 것이라고 밝힘.

□ 천칭타이(陳淸泰) DRC 부주임: 국유자산관리체제 개혁과 신설 국자위의 역할가능 경계

- 3월 18일에 폐막된 전인대에서 국유자산관리위원회 신설이 승인되었는바, 이는 국유자산의 관리감독과 경영 책임을 확실히 하여 재산권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체제와 메커니즘을 구축하기 위함임.
- 금후 정부는 모든 국유기업의 관리자에서 주요 국유기업의 지배주주와 국유자본의 운영자로 바뀌어야 하며, 국유경제는 국가의 통제가 필수적인 업종에 국한시켜야 함.

- 국자위는 국유자산과 관련된 입법과 중재 등 공공관리 기능, 국가소유권의 위탁대리 기능, 국유기업 지배구조 개혁, 국유자산 유실방지 기능 등을 수행할 것임.
- 국유기업군의 광범위한 업종 분포와 엄청난 숫자를 감안할 때 국유자산관리체제 개혁은 국유경제 분포 및 구조조정과 병행해서 실시되어야 하며, 그 과정은 상당히 어렵고 장기간이 소요될 것임. 또한 기업지배구조의 불투명성, 정확한 소유권 행사범위의 규정 문제, 유관 분야의 인재부족 등 난관이 많음.
- 또한 정부 간섭이 철폐된 후 국가소유권이 제자리를 찾지 못할 경우 내부자 통제의 여지를 제공함으로써 국유자산 유실이 야기될 수 있음.
- 한편, 천 부주임은 신설된 국자위가 정부를 대표한 출자자로서의 역할에 집중하지 않고 과거와 같이 기업에 대한 행정간섭을 계속하면 개혁이 원점으로 돌아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를 표명함.

□ 리쯔빈(李子彬) 국무원 서부개발판공실 주임: 소프트환경 개선에 주력

- 서부지역의 낙후는 전면적인 소강사회 건설과정에 가로놓인 최대 난제이며, 서부지역 개발의 중점은 인프라시설과 생태환경 건설에 있음.
- 현재 주요 국도, 공항 건설, 서부 전력의 동부 수송, 청해-서장 철도, 서부 가스의 동부 수송 등 공사가 이미 착공되어 진행중임.
- 서부지역의 과학기술 혁신능력 제고, 산업구조 합리화를 통한 자체 발전능력 강화, 국유기업 개조 가속화, 개인과 사영경제의 발전 장려, 법률체제 완비, 양호한 시장질서 구축, 대외개방 및 대내외 자금 유치 등을 적극 추진하고, 국가는 세수, 재정, 금융 분야에서의 정책적 지원과 안정적인 개발자금 조달채널을 구축해야 함.
- 리 주임은 금후 중국정부가 서부지역의 소프트환경 건설에도 특별히 힘을 기울일 것이며, 도시화와 공업화를 병행 추진할 것이라고 밝힘.

□ **구어슈청(郭樹清) 국가외환관리국 국장:** 관리변동환율제 유지, 적절한 시기에 환율변동폭 확대

- 구어 국장은 중국의 환율제도가 고정환율제나 마찬가지로라는 지적에 대해 1994년 환율단일화 이후 작년까지 주요 무역상대국 통화에 대한 인민폐 가치는 평가절상 추세를 보였다고 주장함.
- 2002년 말까지 미달러화, 유로화(1999년 이전까지는 독일마르크화 기준), 엔화에 대한 인민폐 명목가치의 평가절상폭은 각각 5.1%, 17.9%, 17.0%였음. 아시아금융위기 기간 동안은 미달러화의 강세로 인해 상기 통화들에 대한 인민폐의 최대 평가절상폭은 각각 45.5%, 71.4%, 93.0%를 기록함.
- IMF 통계에 의하면, 1994년 1월-2002년 9월까지 주요 무역상대국의 통화에 대한 인민폐 명목유효환율이 13.9% 평가절상되었고, 물가를 감안하면 동 기간의 실제유효환율은 21.5% 절상되었음.
- 단, 작년의 경우 달러화 약세로 인해 인민폐 실질가치가 미달러화, 유로화, 엔화에 대해 각각 2.8%, 16.5%, 5.2% 하락했으며, 기타 주요 무역상대국에 대한 명목환율 가치도 6% 내외 하락했음.

- 구어 국장은 금후로도 중국은 인민폐환율의 안정을 유지한다는 전제하에서 시장수급에 기초한 관리변동환율제를 유지하고, 적절한 시기에 인민폐환율 결정메커니즘을 개선하여 환율변동폭을 진일보 확대할 것이며, 이 경우 인민폐환율의 상승과 하락이 모두 가능하다고 언급함.

□ **판강(樊綱) 국민경제연구소 소장:** 중국경제 발전 전망 낙관

- 판강 소장은 3월 22일 열린 예비회의에서 중국이 아시아지역 경제성장에 상당한 기여를 했으며, 중국경제의 발전전망에 대해서도 낙관적으로 예측함.
- 중국은 아시아국가들과의 무역에서 거액의 무역적자를 기록(한국 130억 달러, 일본 50억 달러, 동남아 80억 달러)하고 있는바, 이는 역으로 중국경제의 성장이 없다면 아시아국가들의 성장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임을 의미함.
- 세계경제가 어려워져도 중국경제에는 큰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것인바, 그 이유는 경기침체기일수록 저비용 고품질 상품이 내수를 확대할 것이기 때문임.

○ 중국의 수요증가는 재정지출에 의해서만 유발된 것이 아니며, 작년도 고정자산 투자가 64%나 증가했으나 정부투자는 1,000억 원 수준에 머물러 있었음. 중국의 8% 경제성장은 적당하고 지속가능한 수치임.

- 판 소장은 금년 중국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3대 요인으로서 국내수요와 유가, 달러화 추세 등을 지적하고, 특히 석유수입국인 중국에게 국제유가와 석유공급은 장기적으로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함.

□ **치노 타다오(千野忠男) 아시아개발은행 총재:** 중국의 부상과 역내 무역구조 변화

- 치노 총재는 중국의 무역규모 확대로 2020년까지 아시아 역내 무역구조에 큰 변화가 발생할 것이며, 중국 내수시장의 확대는 아시아지역 투자자들에게 상품과 서비스시장을 제공함과 동시에 여타 아시아국가들의 수출증대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함.

○ 중국상품이 구미 선진국시장에서 점차 여타 아시아국가들의 상품을 대체하고 있으나, 중국 내수시장의 확대는 아시아국가들의 수출기회 증대와 그에 따른 역내무역 증가를 가져와 아시아지역의 구미시장 의존도를 낮추고 미국, 일본, 유럽경제의 동시 침체에 따른 세계경제 동반불황의 위험을 감소시킬 것임.

- 동아시아 역내 지역협력 추세와 관련, 치노 총재는 지역협력이 세계화의 발전을 촉진할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세계화가 지역협력을 대체할 것으로 보고, 메콩강개발계획, 중앙아시아지역협력 등 지역협력프로젝트에 대한 중국의 적극적인 참여를 긍정적으로 평가함.

□ **Dwight Perkins 하버드대학 교수:** 농민공의 복지문제 강조

- 지난 25년간 중국사회의 문제점들은 경제의 고도성장을 통해 기본적으로 해소되었으나, 이제는 상대적으로 높은 성장률 유지와 함께 모든 국민이 성장의 혜택을 고루 누리는 분배의 문제가 중요한 과제로 대두됨.

- 이와 관련하여 퍼킨스 교수는 현재 급증 추세에 있는 農民工(도시로 이주한

- 농촌유휴인력)과 그 가족들의 주택, 교육, 의료 여건 개선의 중요성을 제기함.
- 현재 농민공은 대부분 이산가족 상태인바, 이는 농촌에 잔류한 자녀의 교육기회를 박탈함으로써 인력자원의 질적 저하를 가져오고, 사회기강 문란과 성병만연 등 부작용을 야기시키고 있음.
 - 중국의 도시가구당 주택구입 비용을 16만 元으로 가정하면 2억에 달하는 이주가정에 주택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총 320조 元이 필요하고, 이 밖에 학교, 위생시설과 도시 인프라시설을 확충해야 함. 이 모든 비용을 재정지출로 충당할 수는 없으며, 앞으로는 은행융자시스템을 개선하고 민간부문에서 자금을 조달하고, 정부는 인프라시설을 제공토록 해야 함.
 - 한편, 퍼킨스 교수는 농민공의 유입에 따른 도시지역의 대규모 주택건설 및 인프라 확충 공사는 장기적으로 국내수요 확대에 기여하여 중국의 디플레이션 우려를 덜어줄 것이라고 주장함.

□ **Stephen Roach 모건스탠리 수석이코노미스트:** 중국경제는 세계경제의 오아시스

- 로우치 박사는 중국경제가 세계경제 침체 속에서 오아시스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하고, 세계경제에 대한 중국경제의 기여도를 높게 평가함.
- 전세계 GDP 총액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율은 4%에 불과하지만 2002년 전세계 GDP 성장에 대한 기여도는 미국에 이어 17.5%를 기록했음.
- 2002년 중국의 제조업 수출규모는 세계전체의 5%에 불과하지만 동년 세계 제조업에 대한 중국의 기여도는 29%에 달함.
- 그러나 중국이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대외지향형 경제에서 내수중심으로의 성장방식 전환, △디플레이션 압력 해소, △서부개발 등을 통한 지역경제 균형발전 등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함.

□ **안충영(安忠榮) KIEP 원장:** 신뢰와 협력에 기초한 역내 공동번영 강조

- 안 원장은 “세계경제 속의 중국경제”라는 주제발표에서 신뢰와 협력에 기초한

역내 국가들의 공동번영을 강조함.

- 중국경제의 공급과잉과 디플레 지속은 전세계적인 생산시설 과잉(특히 철강, 화공, 조선, 반도체 산업)을 악화시킬 수 있으며, 중국의 세계공장화 가속으로 한국을 포함한 일부 아시아국가들의 산업공동화 현상이 우려되는바, 역내 산업 구조조정 협력을 통해 상생할 수 있는 윈-윈 전략 마련이 시급함.
- 중국의 급격한 무역량 증가와 함께 중국과 관련된 반덤핑 피·제소가 급증하고 있는바, 중국은 WTO 체제내에서 교역상대국과의 무역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임.
 - 또한 안 원장은 동아시아 역내 무역의 증가와 함께 역내 국가간 무역, 투자, 금융 협력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특히 한·중·일 3국간 협력메카니즘 구축의 필요성을 역설함.
- 그러나 여러 가지 경제적·비경제적 요인 때문에 가까운 장래에 3국간 FTA가 실현되기는 어려운바, 당장에는 부문별 협력과 표준화, 규정의 통일과 같은 구체적인 분야의 협력부터 시작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라고 주장함.

□ **박태준(朴泰俊) POSCO 명예회장**: 성장과 함께 분배문제 중시

- 마지막 세션에서 발표자로 나선 박 명예회장은 중국이 2020년까지 소강사회 건설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성장방식의 전환, 산업의 고부가가치화, 소비계층의 다양화에 상응하는 유통시장의 개혁 등 고도성장의 다양한 축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함.
- 또한, 박정희 대통령 시대 한국의 경제성장정책을 예로 들어 고도성장을 중시하면서도 분배의 문제를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한다고 조언함.(***)